

미국 · 캐나다 · 일본 사례로 본 IT 국제기구 정책결정 과정

연구원 안상은*

정보통신이말로 국경을 넘는 정책 조율이 긴요한 분야로서 특히 국제기구 주도의 의제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다. 다양한 국가의 이익이 정책결정 과정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 내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요국과의 공통의 이해 관계를 확보하고 각국 내 주요 정책결정자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 대표단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이해가 긴요하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interagency coordination)를 중시하여, 국무부, FCC, NTIA, 국토안보부가 함께 정책협약에 참여하되, 국무부가 최종 조율에 나선다. 캐나다는 산업성에서 산업분야 진흥에 초점을 두고, 정보통신 의제를 검토하며 기구별 담당자의 결정권이 중시되며, 일본은 총무성 내 기구별 담당 조직을 두고 대응을 하고 있어 해당 실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각국의 IT 발전에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고안된 독특한 부처 조직과 정치 환경의 산물인 정책결정 과정을 미리 숙지하고 협의를 전개할 때에 해당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와 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력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캐나다의 IT 국제기구 활동 |
| II. 미국의 IT 국제기구 활동 | IV. 일본의 IT 국제기구 활동 |
| 1. 국무부 | V. 구조적 차이에 따른 대응 방안 |
| 2. FCC | VI. 결론: 국제기구 활동의 의의 |
| 3. 상무부와 NTIA | |
| 4. 국토안보부 | |

I. 서론

국가간에 협력이 필요한 문제, 양자관계를 넘어 다자가 복합적으로 관계된 국제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기구(國際機構, International Organization, IO)라는 조직이 생겨난지 100

연락처: * 방송통신협력연구실 API협력센터, (02) 570-4213, sangeuna@kisdi.re.kr

여년이 훌쩍 지났다. 해양의 이용, 교통·통신의 이용,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노동력의 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국가적 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어온 국제기구들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국제사회의 행위자로서의 입지가 강화되기도, 약화되기도 하였다. 전세계적인 경제통합과 교통·통신의 발달에 의한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보이지 않는 힘은 국제기구를 다시 주요 행위자로 관심의 대상이 되게 할 뿐 아니라, 기존의 정부간 기구 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로 이루어진 NGO 등 비국가 행위자를 출현시키고 국제정치가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라는 새로운 시각을 태동시켰다. 특히,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 UPU)이라는 첫 번째 국제기구, 그리고 곧이어 세계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이 설립되었던 것처럼 우편을 포함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국제기구의 필요성 및 역할은 다른 어느 분야에서 보다 강조되어 왔다. 또한, 정보화로 인한 지식경제로의 변모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정보격차가 전세계적 불평등 확대 및 새로운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여, 디지털 기회의 확대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국제기구는 국가 혹은 기업 등 여타의 집합적 단위 행위자와 유사하게 다양한 별개의 이익을 갖는 부분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로서, 국제사회에서 이미 국제적 행위 및 사안의 과정과 결과에 독자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로서 인정되고 있다. 기존의 현실주의 냉전체제 시절에는 국제기구가 단순히 국가의 집합체로서 강대국 국가이익을 대신 집행하는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라고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다양한 초국가적 행위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지금의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는 자체적으로 국제여론을 주도할 이슈를 생산해내고 정책 대안을 개발해내는 단위 행위자, 주체일 뿐 아니라, 다수의 국가라는 하부 행위자가 동시에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정책 결정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세계 인류의 공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토론의 장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화 선도국의 이미지 구축을 통해 표준화 등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세계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한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방송통신 분야 국제기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선진국 및 발전된 기술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국가브랜드 이미지, 국제기구 이슈에 대해 EU, NAFTA, OAS 등 지역경제협력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 대응 추세, 대내적으로는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자원 낭비, 국제기구 업무의 지속성 및 일관성 부족, 총체적 기획력 미흡 등으로 획기적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현상유지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사무국과의 유대를 강화한다며 본국 공무원들의 해외 파견을 위해 예산을 들여 노력하고 있는 동안, 이미 다수의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등의 국제

기구 담당 공무원은 국가의 지원없이도 UN, ICANN, ISOC 등의 다양한 국제기구 및 협의체에 전문가로 개별적으로 특채되어 본국의 정책과 아이디어를 부지불식 간에 전세계에 심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고는 미국·캐나다·일본의 삼국이 정보통신 분야 국제기구 활동을 실제 어떻게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주요 행위자 간에 진행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위 삼국은 정보통신 분야 국제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성과 영향력, 그리고 대응 부처 조직의 특이성에 관심을 두고 선택하였다. 즉 미국의 경우 다양한 부처가 참여한다는 점, 캐나다의 경우 산업 부처가 정보통신 분야를 관장한다는 점, 일본은 정보통신국제협력 전문 조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들이다. 각국의 정보통신 담당 부처 및 조직을 주로 다룬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고는 문헌 상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을 실제 국제기구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조사분석한 바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문헌이 접근하지 못한 사실상의(de facto)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이와 같이 국제정책 실행의 장에서 행위자들과 시점을 같이하여 국가별 행위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정보통신 분야 국제기구 활동의 실체에 대해 궁금해하던 연구자들과 동 분야 국제활동에 갖 받을 들인 정책입문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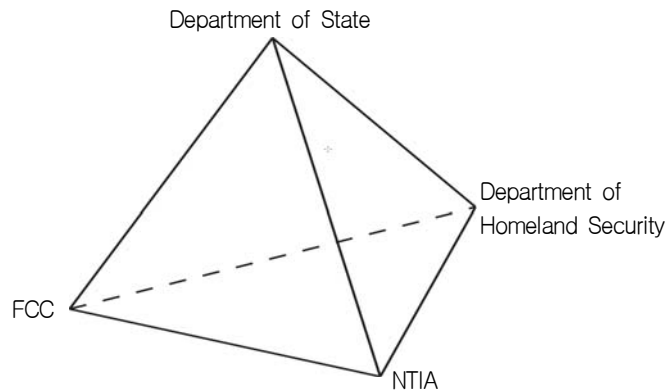
II. 미국의 IT 국제기구 활동

ITU 등 통신 관련 국제기구 내에서 미국의 대표성은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독특한 구조를 통해 발현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와 주정부(state government) 간 협의, 연방 정부 내 부처간 협의 등 특정 이슈에 대해 국가의 크기와 다양성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이하므로, 다양한 수준, 범위의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부처간 협의'(interagency coordination)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부처간 협의의 중요성이 반영된 정사면체 구조(그림 1)로 미국의 국제통신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의외로 정보통신분야 국제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의 정점에는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가 아니라 모든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미 국무부가 있다. 국제기구에서도 일관된 미국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모든 국제기구 및 정부간 국제 회의, 포럼, 각종 정부 행사에 수석대표(Head of Delegation, HOD)로 참석하고, 분야별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국제현장에서 정책을 결정, 수행하게 된다. 반면 밑면 삼각형의 각점은 FCC, 미 통신정보관리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이하 NTIA)이 대표하는 미 상무

부(Department of Commerce),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각각 통신정책 및 규제, 방송통신 시장 및 기업문제, 정보보안 등 분야별 전문성을 띄면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림 1) 미국의 IT 분야 국제기구 정책결정 모형



굳이 방송통신 분야 뿐 아니라 모든 영역의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이익이 반영된 안건을 채택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의 로비 이상의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강대국의 지위와 컨센서스(consensus)제인 국제기구 합의방식을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한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반대하여 채택을 막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실제 국제기구 내에서 어떠한 안건이라도 채택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안건제안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미국의 국제정책 의사결정과정을 염두에 두고 대표단의 누구를 가장 먼저 설득하여야 효과적인 것인가를 파악하면 가장 효율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책 및 규제, 인프라, 정보보안이라는 각각 독립된 영역을 이루는 정사면체 밀면 각점에 해당하는 안건이라면, 해당 기관의 담당자를 먼저 찾아가 안건을 소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수석대표에게 안건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다른 국가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여러 영역에 걸쳐 있으며 영향력이 있는 안건이라면 최종 결정권이 있는 국무부 수석대표와 먼저 접촉하여 안건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설득하는 것이 미국 대표단 내에서 그가 협의를 주도하여 찬성표를 끌어낼 수 있게 되는 유효한 방법일 것이다.

1. 국무부¹⁾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자간 회의 및 지역 포럼 등에서 미국 대표단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는 수석대표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주관하는 국무부의 몫이다. 즉, 국제기구 및 회의의 대표단 파견 시 담당 부처 최고위 당직자가 수석대표를 맡게 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대표단에서는 국무부 회의 담당자가 전체 미국 대표단의 수석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실질적으로는 국무부 회의 총괄 담당자의 직위가 과장(Director) 이상 수준으로 높아 수석대표를 맡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이들은 수석대표는 모든 회의의 연락망(Points of Contacts, POC)을 맡아 미국의 유일한 연락처로서 공식적으로 정보를 독점한다. 수석대표는 국제기구에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의제나 회의 어젠다 등이 이메일을 통해 회람될 경우,²⁾ 이 내용을 혼자 전달받아 정리한 후 각 부처별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전달(forward)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APEC TEL과 같은 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은 회의 개최 전 아침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수석대표를 필두로 그 날의 회의 개요와 대응 방안을 정리한 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수석대표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조율하고 있다. 통신 관련 기구에서 부처별 협의가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 논의될 시에는 수석대표와 FCC, NTIA 담당자를 중심으로 의제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무부 내에서는 EEB로 알려진 경제담당국이 통신 관련 국제기구 업무를 맡고 있다. 경제, 에너지 및 농업 문제 담당 차관(Under Secretary for Economic, Energy and Agricultural Affairs)³⁾ 및 차관보(Assistant Secretary)의 지휘 아래,⁴⁾ 경제, 에너지 및 비즈니스 담당국(Bureau of Economic, Energy and Business Affairs, 이하 EEB)은 세계 경제 환경에서 미국의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위해 모든 대외경제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실국이다. 경제국에는 7개 그룹이 각각 국제금융, 에너지, 교역, 교통 등의 분야별로 나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 국제통신정보정책 그룹(International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Policy, CIP)이 모든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제통신정보정책 그룹은 모든 국제기구 및 다자-양자간 회의, 포럼 등에서 수석대표로 미국을 대표하는 최종 행위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US 국제정보통신정책 코디네이터(United

1) <http://www.state.gov>

2) 2000년대에 들어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없는 회의'(paperless meeting)를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세로, 국제기구 및 회의의 여러 현안들은 이메일 혹은 인터넷을 통해 열람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3) 2008년 9월 현재, Mr. Jeffery Reuben III가 맡고 있다.

4) 2008년 9월 현재, Mr. Daniel S. Sullivan이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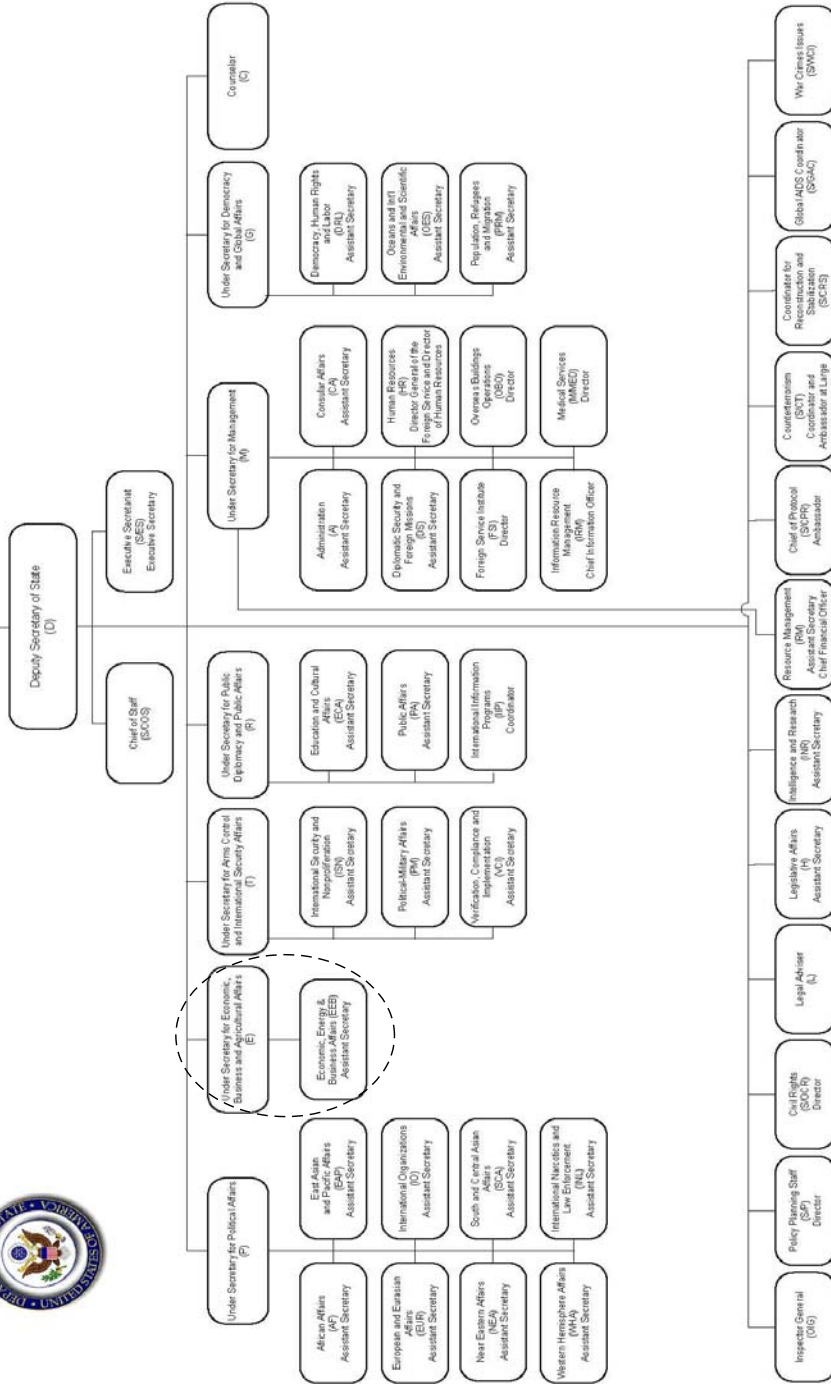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Administrator
Director of Foreign Assistance

United States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USUN)

(그림 2) 미국 국무부 조직도



Approved by SES January 2008

States Coordinator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Policy) 직책의 대사급이 이끌게 된다. 2008년 9월 현재로서는 2001년 1월부터 부시 대통령에 의해 코디네이터직에 임명되고 상원 인준을 받은 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 겸 대사(Ambassador) 데이빗 그로스(David A. Gross)가 그룹을 이끌고 있다. 국제통신정보정책 그룹의 정책활동 목표는 1) ICT에의 모든 사람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2) 자유 시장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세계 ICT 및 통신시장의 효율과 보안을 증진하고, 3) 모든 미국 기업이 세계 주요 부문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함을 들 수 있다. 국제통신정보정책 그룹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ICT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정책을 추진하고, 통신시장의 효율을 높이는 등 위에 열거한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 기업에 친화적인 세계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통신정보정책 그룹에는 3개 과가 있어 각기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들은 양자 및 지역관계과(Office of Bilateral and Regional Affairs, BA), 다자관계과(Office of Multilateral Affairs, MA), 기술 및 보안정책과(Technology and Security Policy, TS)이다. 양자 및 지역관계과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 등 각 지역 정부와의 통신정책 협의를 담당하며, 기술 및 보안정책과가 위성 및 주파수 허가제, 수출입 관련 공정성 문제, 법 강제 등 ICT 시장 전반의 기술적 문제를 담당하는 반면, 국제기구 및 다자간 협의체에서의 전반적 논의는 모두 다자관계과에서 책임을 지고 수행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소속 미주전기통신위원회(Commission for Inter-American Telecommunications, CITELE) 등 다양한 지역과 수준의 국제기구 및 협력체 관련 업무가 모두 해당된다. 즉, 통신 관련 국제기구 회의에 파견된 미국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대개 국제통신정보정책 그룹 다자관계과의 과장급 이상이 된다.⁵⁾ 이들 수석대표는 대개 국제정보통신 분야에서 경험이 오랜 인물들로 정권이 유지되는 한 담당자가 쉽사리 바뀌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 및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수석대표들은

5) 실제 2008년 현재, ITU 이사회(Council) 회의와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 Policy, ICCP) 회의에서는 Senior Deputy US Coordinator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Policy인 Mr. Richard Beird(Mr. Beird는 현재 OECD ICCP 부의장직(Vice Chair)도 맡고 있음)가, APEC 통신실무그룹(APEC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APEC TEL) 회의에서는 APEC and OECD Affairs Director인 Mr. John R. Rodgers가 각각 미국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다.

오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정책 분야에서는 FCC 담당자들과, 각종 인프라·기술 및 표준화, 주파수 분야에서는 NTIA 전문가들과(경우에 따라 군용 주파수 대역과 관련된 문제는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정보보안 및 올바른 인터넷 사용 환경 등과 관련한 문제는 국토안보부 전문가와 상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석대표들은 국제통신정책의 영향을 받는 소비자 그룹 및 국내 민간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결정된 정책이나 대응 방안은 수석대표의 이름으로 국제기구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다.⁶⁾

2. FCC⁷⁾

명실공히 미국 내 방송통신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FCC는 통신사업자 및 방송사 규제 기능을 양측으로 하여 설립된 독립기구이다.⁸⁾ 5명의 상임위원(Commissioner)으로 구성된 FCC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5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대통령에게 보고(report)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advise)을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총괄하는 행정부에서 독립적이다. 5명의 위원 중 위원장(Chairman)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 중 과반수가 동일 정당 출신일 수 없으며, 각 5인 중 1인이 해마다 임명(재임 가능)되는 방식으로 상호 간에 교차적으로 임기를 완료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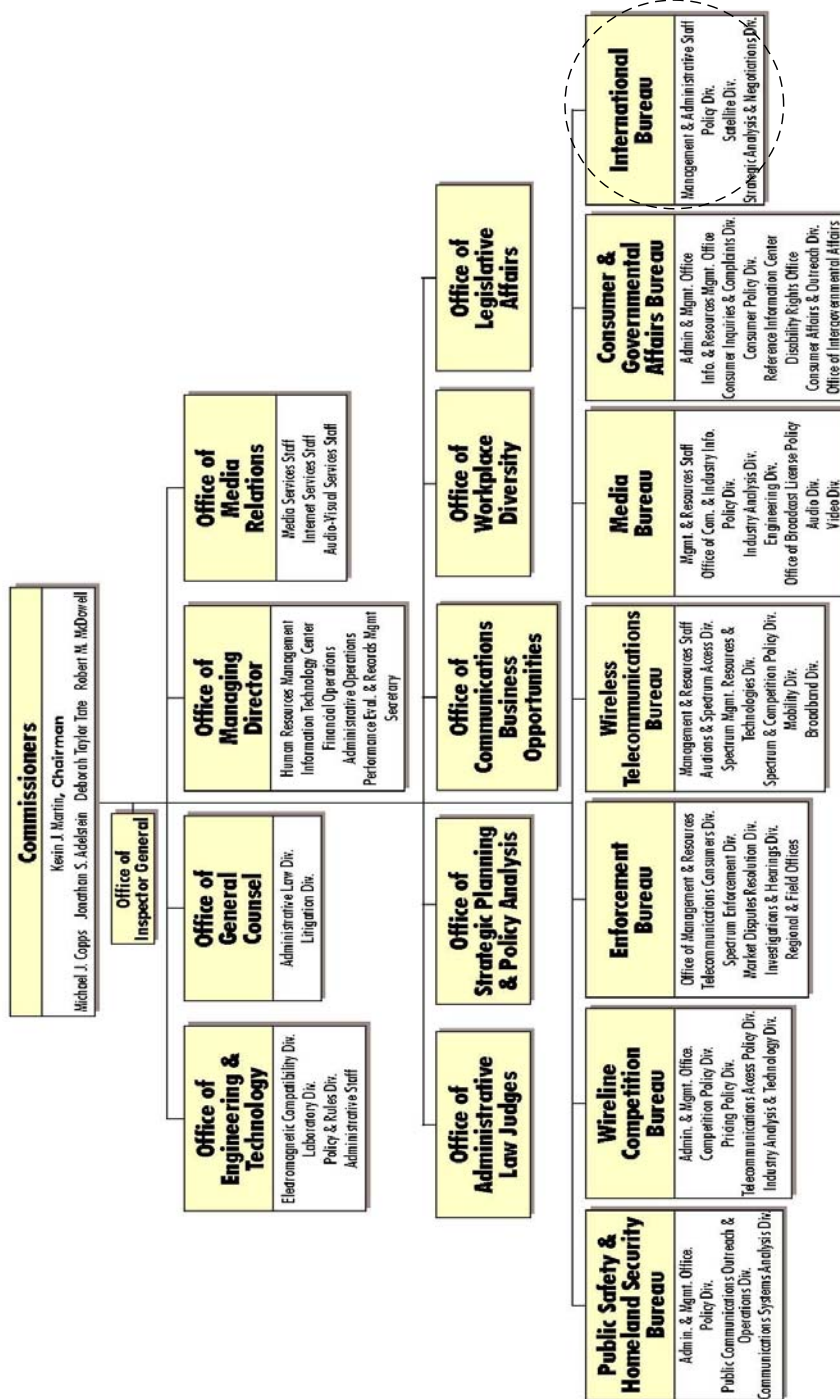
합의제 기구로서 위원들의 투표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 산하에는 각각 전문산업 분야에 따라 7개 업무국(bureau)으로 나누어져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유선경쟁국(Wireline Competition Bureau), 미디어국(Media Bureau), 무선국(Wireless Bureau), 국제국(International Bureau), 시행국(Enforcement Bureau), 소비자·정부관계국(Consumer and Government Affair Bureau),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국(Public Safety and Homeland Security Bureau)이다. 이들 정책입안국에서 실제 방송통신 산업 관련 의제와 안건을 대부분 준비하고 상당한 수준의 결정권도 주어져 각 업무국별 국장선에서 규정 제정과 판결 절차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률 자문, 전략 기획,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11개 행정 부서(Office)가 있다.

6) Qualcomm Inc.의 경우, APEC TEL 회의마다 비공식 만찬을 주최하여 주요국 대표단 수석대표 등을 위시한 참석자들을 만찬에 초청하는 등 국제통신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7) <http://www.fcc.gov>

8) FCC의 설립 연혁 및 기능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imberly A. Zarkin and Michael J. Zarkin,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ront Line in the Culture and Regulation Wars*, Greenwood Press, Westport, 2006. 참조

(그림 3) 미국 FCC 조직도



국제사회에서 FCC를 대변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제국은 국장실(Office of the Bureau Chief)을 포함하여 정책과(Policy Division), 위성과(Satellite Division), 전략분석 및 협상과(Strategic Analysis and Negotiations Division)로 구성되어 있다.⁹⁾ 국제국은 국제통신 이슈에 있어 연방정부, 국제기구 및 해외 기관, 외국 정부 등에 대해 FCC를 단독 대표하고 있다.¹⁰⁾ 이중 국제기구 및 회의, 포럼 등에서 FCC를 대표하는 담당자들은 주로 전략분석 및 협상과의 전문가들로 이들 역시 국경간협상 및 조약이행 분과(Cross Border Negotiations and Treaty Compliance Branch), 국제전파통신 분과(International Radiocommunication Branch), 다자간협상 및 산업분석 분과(Multilateral Negotiations and Industry Analysis Branch), 지역 및 양자관계 분과(Regional and Bilateral Affairs Branch)로 나누어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략분석 및 협상과는 WRC를 포함한 모든 ITU 회의 및 포럼, APEC, CITEL 등 지역기구, 캐나다와 멕시코간 국경간 협상 등 모든 국제적 수준의 협력에서 FCC를 대표하고 있으며, 외국 정부 대표 및 기관들의 FCC 방문도 총괄 준비하며, 세계 통신 시장 현황 및 규제 환경 조사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¹¹⁾

미국은 방송통신 관련 국제기구 및 회의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세계 주파수 대역 할당권을 가진 ITU 세계전파총회(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s, WRC) 회의에 특히 중점을 두어 활동하고 있으며, FCC에서는 이를 전략분석 및 협상과 전파회의과장(World/Regional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Director)¹²⁾이 총괄하고 있다. OECD ICCP 관련 정책에는 국제국장실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APEC TEL 등 지역기구 회의에는 지역 및 양자관계 분과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년간 연속성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 물론 의제 사안에 따라 타 부서 소속 전문가들의 참여가 열려 있으며, 국제국에서는 주로 미국의 입장에서 국제방송통신정책 및 규제 관련 의제가 자국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유화 관련 의제 개발 및 제안을 진행하고 각종 국제기구 내 정책 협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

9) 2008년 9월 현재, Ms. Helen Domenici가 국장직을 맡고 있으며, 국제국에만 국장실 20인, 정책과 25인, 위성과 38인, 전략분석 및 협상과 46인이 근무하고 있는 대형 조직이다.

10) "...Serves as the single focal point within the Commission for cooperation and consultation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matters with other federal agencies, international or foreign organizations, and appropriate regulatory bodies and officials of foreign government.", International Bureau's Functions, <http://www.fcc.gov/ib/functions.html> (2008년 9월 3일 접속)

11) 국제국의 업무 및 활동 개요는 '국제국 연차보고서'(International Bureau 2007 Annual Report, January 17, 2008)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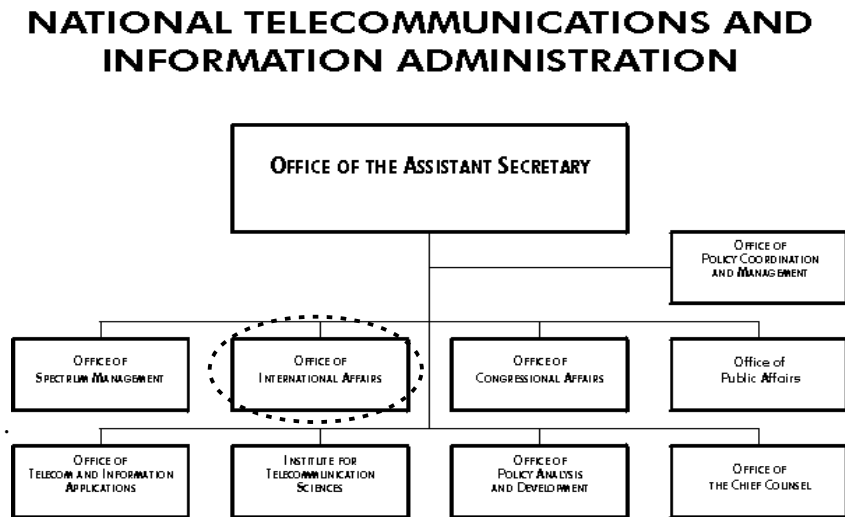
12) 2008년 9월 현재, Mr. Alexander Royblat(Assistant Chief and World/Regional Conference Director)가 담당하고 있다.

으로 세계 방송통신 시장 환경 조성에 참여하고 있다.

3. 상무부¹³⁾ 와 NTIA¹⁴⁾

NTIA는 백악관의 통신정책청과 상무부의 통신청을 통합하여 창설한 상무부 14개 산하기관 중 하나로, 연방정부와 국제간의 통신과 정보기술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FCC와의 다른 점은 산업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연방 차원의 주파수 대역 관리를 포함하여 통신산업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국내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통신기반 확장 등 과학기술 중심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NTIA는 주파수관리과(Office of Spectrum Management, OSM), 정책분석 및 개발과(Office of Policy Analysis and Development, OPAD), 국제관계과(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OIA), 통신과학연구소(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s Sciences, ITS), 통신정보응용과(Office of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pplications, OTIA), 그리고 정책협의, 공보, 의정 등 정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장(Administrator)에는 차관급 인사가 임명된다.¹⁵⁾

(그림 4) 미국 NTIA 조직도



13) <http://www.commerce.gov>

14) <http://www.ntia.doc.gov>

15) 2008년 9월 현재, 통신 및 정보 담당 차관 서리(Acting Assistant Secretary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인 Ms. Meredith Attwell Baker가 맡고 있다.

국제관계과는 모든 국제기구 및 회의, 협상 등을 포함한 국제업무를 담당하며, ICT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의 경쟁 및 정책 자유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제관계과의 활동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국제 ICT 정책, 목표 및 전략을 세우며, 둘째, 미국의 정책 이익을 증진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제관계과에서는 스펙트럼 관리 및 통신기술, 인터넷 도메인 네임 서버(DNS) 등과 관련하여 국제정책 상의 이슈를 글로벌 시장 환경을 배경으로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문을 행하고, 경쟁친화적이고 유연한 정책 환경을 전세계 수준에서 조성하여 미국의 정책 이익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수위의 양자·지역간·다자간 회의 및 협상에 참여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FCC와 마찬가지로 국제관계과 내에 국제기구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 ITU, APEC, OECD, ICANN, WTO 등 교역 관련 협상, 양자관계 등을 각각 전담하고 있으며, 수년간 같은 국제기구 업무를 전담하여 기구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¹⁶⁾ 특히 NTIA 담당자는 국제기구 내에서 '개발'(Development) 분야라고 일컬어지는 인프라 확산이나 정보격차 해소, 정보통신기술개발, 디지털 TV 송출, 인터넷, 해저케이블 등과 관련한 통신 전반의 기술 및 기기 관련 문제를 맡아 미국의 입장을 분석,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4. 국토안보부¹⁷⁾

통신인프라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인터넷 이용이 보급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는 바로 다양한 종류의 초국가적 사이버범죄와 컴퓨터침해사고와 같은 정보보안 문제이다. 인터넷 상 외설, 음란물과 같은 사안은 FCC가 관할하고 있으나 통신인프라 전반의 보안성 및 신뢰성 강화는 국토안보부가 2003년 신설되면서 담당하게 되었다. 국토안보부는 9·11 이후 시민안보 개념이 소개되면서, 이민 및 시민권 관련 업무, 인권, 정보분석, 긴급대응, 국경보안 및 교통안전 등 시민사회 전반의 다양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창설된 부처이다. 이중 차관보급¹⁸⁾이 이끄는 사이버보안 및 통신과(Office of Cybersecurity and Communications, CS&C)에서 미국 내 국가정보통신 인프라를 작동시키는 네트워크, 시스템 및 기타 자산에 피해를 가하는 사고에 대응하고 있어, 국제사회 및 공공, 민간 분야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국을 대표하

16) 2008년 9월 현재, Ms. Fiona Alexander가 국제관계과장(Associate Administrator)을 맡고 있으며, 총 9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17) <http://www.dhs.gov>

18) 2008년 9월 현재, Mr. Gregory Garcia가 맡고 있다.

고 있다.

사이버보안 및 통신과는 국가사이버보안센터과(National Cyber Security Division, NCSD) 및 긴급통신과(Office of Emergency Communications, OEC)로 나뉘어지며, 전자에서 국토안보부를 대표해 국제기구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사이버보안센터과는 효율적인 국가 사이버공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유지하고, 주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사이버위해 관리 프로그램 수행함을 양대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사이버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법부 및 검찰 등 연방 13개 기관이 업무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 위기사태에 대응하여 국가사이버보안센터과에서 주도권을 쥐어 국가경보시스템(Cyber Security Preparedness and the National Cyber Alert System)을 구축하고 협력 그룹(National Cyber Response Coordination Group, NCRCG)을 구성,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제 활동의 주요 행위자는 US-CERT(컴퓨터침해사고긴급대응팀, US Computer Emergency Readiness Team)¹⁹⁾로 이는 초국가적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인터넷 인프라 보호 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US-CERT는 KrCERT(한국), AusCERT(호주) 등 다른 나라의 CERT와 협력하여 APEC TEL²⁰⁾에서 침해대응 국제모의훈련(Cybersecurity Exercises)을 실시하기도 하고, 침해대응 전문가훈련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토안보부에서는 OECD ICCP 산하 정보보호작업반(Working Party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WPISP)에도 참여하여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정책 입안에 적극 나서고 있다.

III. 캐나다의 IT 국제기구 활동

캐나다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또는 앞으로 설명할 일본과 달리, 산업 관련 부처에서 정보통신 인프라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산업성(Industry Canada)²¹⁾이 정보통신 관련 정책진흥기능을,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통신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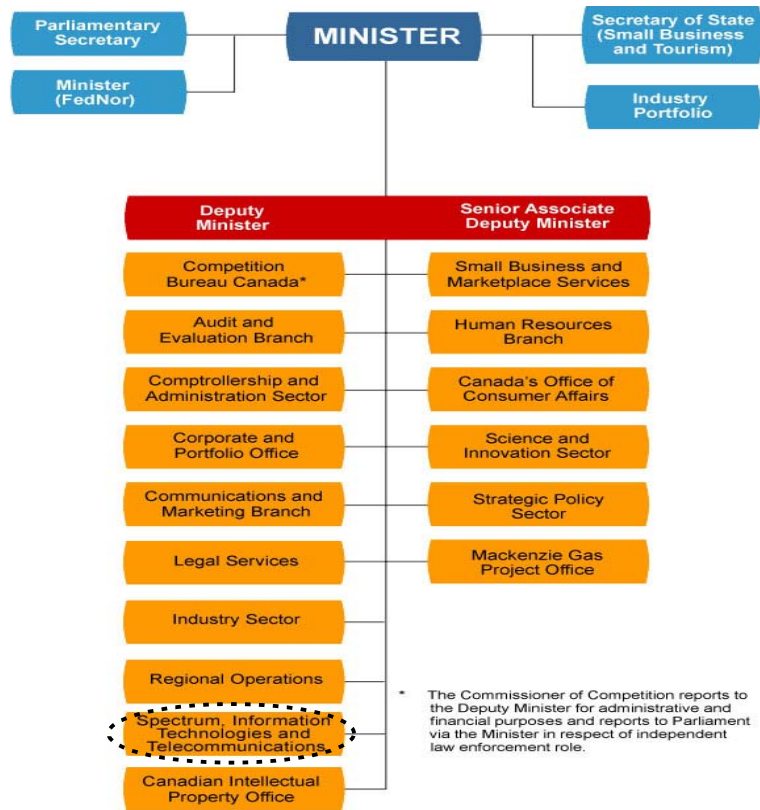
19) <http://www.us-cert.gov> US-CERT는 미국의 국가컴퓨터침해사고긴급대응팀으로 최초의 CERT로 널리 알려져 있는 CERT/CC(CERT Coordination Center)와는 다르다. CERT/CC는 카네기 멜론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에 설립된 센터로 인터넷 취약성 및 보안 대응책 등을 연구하며, 긴급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CERT간 대응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20) 국토안보부 국가사이버보안센터과 국제관계담당(International Affairs Liaison) Ms. Jordana Siegel이 APEC TEL 보안 및 번영 운영그룹(Security and Prosperity Steering Group, SPSG) 부간사(Deputy Convenor)직을 맡고 있다.

21) <http://www.ic.gc.ca>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CRTC)²²⁾에서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방송 분야는 문화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독립 방식이다. 방송과 통신이 분리되어 있으나, 미디어 규제라는 측면에서 CRTC에서 통합 관장하고 있어 규제간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 정보보호 등과 같은 분야별 이슈는 연방개인정보위원회(Federal Privacy Commissioner)가, 전자정부는 내각 내 재무부처에서 관할하는 등 전문성에 따라 전담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산업성이 통신주관청으로서 통신정책 및 주파수 관리 등을 맡고, CRTC에 대해 일반적인 통신 및 방송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등 규제정책 입법을 포함, 거의 모든 정책 상의 무게중심은 산업성에 몰려있는 셈이다.

(그림 5) 캐나다 산업성 조직도



22) <http://www.crtc.gc.ca> CRTC는 통신 및 방송서비스 분야 규제 감독 책임을 지는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내각이 13명의 상임위원(위원장 포함)과 6명의 비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나, 현재 위원장과 11명의 상임·위원과 1명의 비상임위원이 5년 임기로 활동 중이다.

국제기구 회의 및 활동도 산업성에서 대표단의 HOD직을 맡아 담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활동도 전자상거래 등 기업 및 산업 진흥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양한 수준의 전자상거래의 전세계적 확산 뿐 아니라 캐나다 통신기업이 해외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 통신 정책 및 규제의 틀을 조율하고, 방대한 국토 면적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및 확산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농어촌 벽오 지역 IT 역량 강화 및 교육정보화를 위해 캐나다 산업성이 수년간 국제기구 내 이니셔티브를 높여온 것도 이에 포함된다.

산업성 내에서는 주파수·정보기술·통신국(Spectrum,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 SITT)이 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국 내에 전자상거래부, 정보통신기술부, 정보고속이용부, 라디오통신 및 방송규제부, 주파수공학부, 통신관리서비스 정책부, 통신연구소 등 부서가 있다. 특이한 점은 이들 중 국제기구 성격에 따라 각각 적합한 부서에서 산업성을 대표하는 국제기구 담당자가 나와 HOD직을 맡고, 이 해당 기구 담당자가 기구 내 의제를 총괄대응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정책·규제와 함께 NGN, MRA 등 정보통신 인프라 및 관련 기술이 논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 이슈가 다양한 기구, ITU와 지역협력체 APEC의 경우, 통신정책부(Telecommunications Policy Branch)의 국제통신정책담당관실(Director for International Telecom Policy and Coordination)²³⁾의 아시아정책담당이 맡고,²⁴⁾ 주로 국제경제협력과 관련한 정보통신 이슈를 다루는 OECD ICCP와 국제교역 상 정보보호가 큰 이슈인 OECD WPISP 등 경제교역 기구에는 전자상거래부(Electronic commerce Branch)의 담당자가 HOD를 맡는 등²⁵⁾ 같은 부처 내에서도 기구 성격 및 의제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제도화하였다.

통신기술 및 응용, 브로드밴드 등 분야별 해당 전문가가 각기 대응하더라도 아예 부처별 정책이 별개인 미국과 달리 모두 한 부처에 소속되어 산업 분야 진흥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직급과 별개로 해당 기구의 HOD를 맡은 이에게 바로 전문가 견해가 전달되고 의견을 조율하기가 수월한 편이다. 캐나다의 경우, 이 해당 기구의 총괄 HOD의 운신의 폭이 커서 기구에 대한 전문성 및 독립성을 인정받아 주요 회의 시 상급자가 동행하더라도

23) 오랜 기간 담당을 맡던 Mr. Bill Grahaem 후임으로 Ms. Kathy Fisher가 2008년 9월 현재 담당하고 있다.

24) 2008년 9월 현재, 아시아 담당 Senior Policy Advisor인 Ms. Susan Johnston이 APEC TEL HOD이며, APEC TEL LSG 간사를 맡고 있다.

25) OECD는 그 경제협력의 성격에 맞추어 전자상거래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부 부장인 Mr. Richard Simpson은 ICCP 의장직도 맡고 있으며, 기타 ICCP 산하 작업반은 전자상거래부 내 정책과장대리 Ms. Elizabeth Jane Hamilton이 맡고 있다.

실질적 HOD로서 의사결정권이 상당히 확보되고 있다.

IV. 일본의 IT 국제기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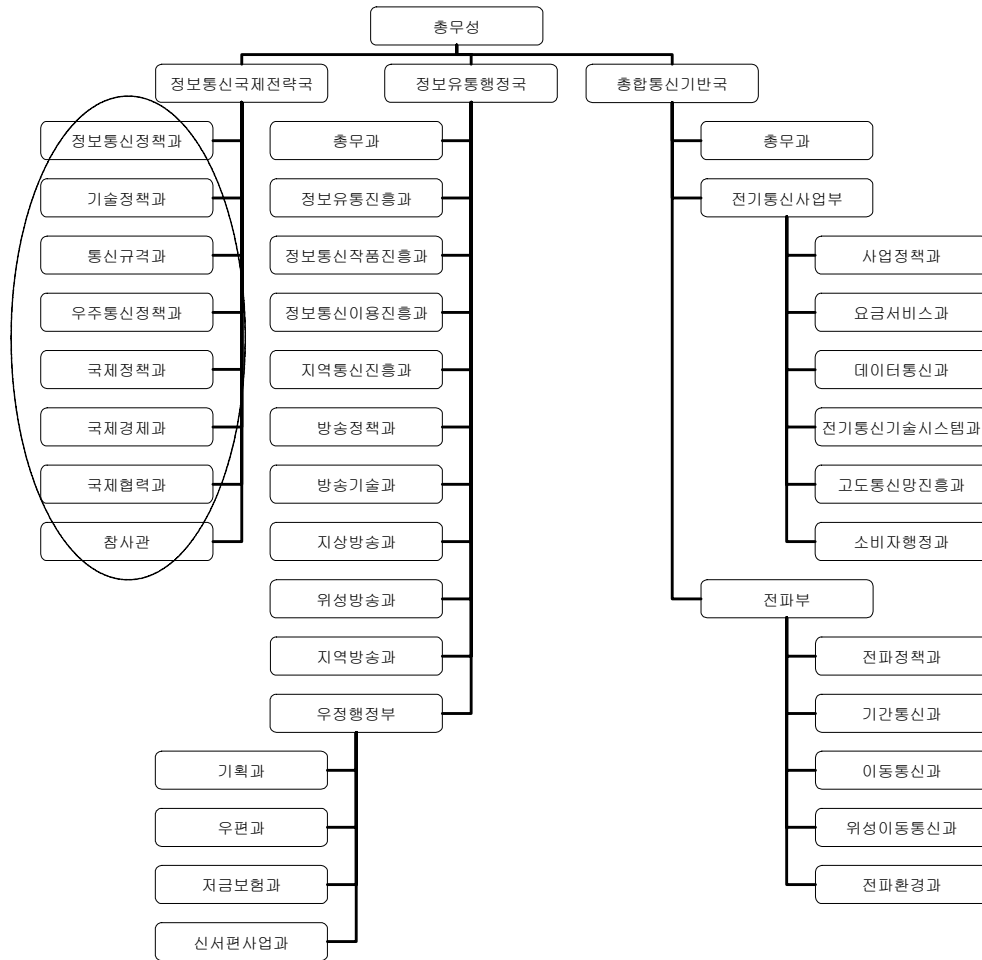
2008년 2월, 우리나라가 과거 전파 및 전기통신, 우편 등 통신 분야 모든 정책 및 규제를 총괄하는 정보통신부를 두었다가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로 부처를 통합, 재구성한 바와 달리, 일본은 지금 IT 전담 부처인 총무성(總務省,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C)²⁶⁾의 역할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산업 전담 부처인 산업성에서 IT 산업의 정책 및 규제를 담당케 한 캐나다와도 달리, 일본의 총무성은 공무원 인사 및 행정, 지방자치제도의 재무 및 행정, 선거제도, 방재 및 국민 통계까지 담당하는 방대한 조직이다. 정보처리진흥을 관장하는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을 제외하고는 모두 총무성이 관할한다. 총무성 내 각각의 업무영역은 국별로 나누어져 별개로 이루어지며, 방송·전기통신·전파·우편·전자정부 등을 다루는 통신 분야 업무는 가히 일본 IT 전체를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총무성은 2008년 7월 4일, 기존의 조직을 재조직하여 ICT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치를 내걸었다. 기존의 통신 관련 부서였던 우정행정국, 정보통신정책국, 종합통신기반국의 3개국을 정보통신국제전략국, 정보유통행정국, 종합통신기반국의 3개국으로 재편하여, 국장 이하 3개국 본부 인원만 754명, 지방 종합통신국 1,392명으로 5,209명의 총무성 조직의 전체 절반 가량이 근무하는 총무성 내 초대형 조직이 되었다. 방송 및 우정, 콘텐츠 육성을 담당하는 정보유통행정국과 NGN 구축, 정보보안 및 경쟁 촉진 등 규제 정비, 전파 이용의 효율을 도모하는 종합통신기반국과 함께, 정보통신국제전략국은 '일본의 ICT 국제경쟁력 강화'²⁷⁾라는 총무성 최고 정책목표의 실현을 최선방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되었다.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국제전략국은 "ICT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 통신·방송의 융합, 연계에의 대응을 세계적으로 먼저 실시하기 위해, 정보통신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전략의 기획 입안을 담당하는 부서"인 셈이다.

26) <http://www.soumu.go.jp> soumu는 총무성(總務省)의 '총무'를 일본어로 읽었을 때의 발음이다.

27) 일본은 2006년부터 'ICT국제경쟁력간담회', 2007년 5월부터 'ICT국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일본의 ICT 강점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제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8년 7월에는 'ICT국제경쟁력강화프로그램 ver.2.0'을 채택하여 새로운 총무성 조직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ICT國際競爭力強化プログラム ver.2.0, 平成20年7月29日, 總務省.

[그림 6] 일본 총무성 정보통신 관련국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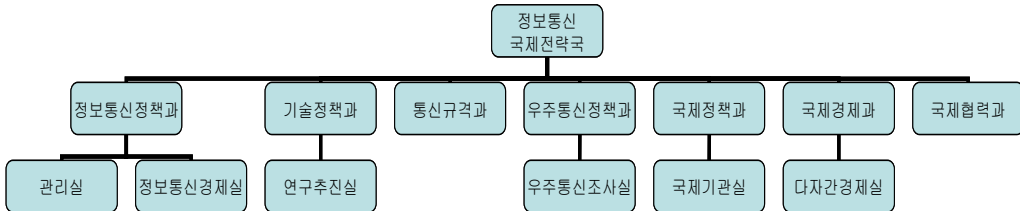


과거 총무성 내에서 정보통신 관련 부서는 우정행정국과 정보통신정책국, 총합통신기반국의 3개국이었다. 이 중 총합통신기반국이 전기통신 관련 업무를 다루면서 국제정책과, 국제경제과, 국제협력과의 3개 과 체제로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 WTO, FTA 등의 협상을 담당하였다. 이들 3개 과가 정보통신국제전략국 아래로 새로이 조직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존 담당 과장과 담당 사무관 직책 등 주요 인물이 모두 그대로 옮겨오는 등 인적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준화나 위성, 주파수 배치 등을 제외한 순수 방송정보통신 관련 국제정책 업무만도 3개 과(課, Division)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보아도 총무성에서 모든 국제기구 대응을 포함한

국제정책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개 과 중 국제정책과, 국제경제과는 각각 하부 실(室, Office)을 한개씩 두고 있다. ITU와 APT 등 보다 통신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진 국제기구 대응은 국제정책과 내 국제기관실(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fice)에서 수행하고 있다.²⁸⁾ 국제경제과의 다자간경제실(Multilateral Economics Affairs Office)에서는 APEC과 OECD를 포함한 경제협력기구를 담당한다.²⁹⁾ ASEAN 및 한·중·일 관계 등의 아시아 관련 근린지역 업무는 국제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³⁰⁾ 이러한 정보통신국제전략국의 업무 배분은 우리나라의 구(舊)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협력국 체제와 매우 유사하며, 심지어 담당 직책의 업무 배분도 유사한 경우가 많아 이해가 쉽다.³¹⁾

(그림 7) 일본 총무성 정보통신국제전략국 조직도



일본의 경우, 국제기구 회의 전에 모든 안건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거치는 데, 특히 모든 제출 문서와 의제를 모두 일본어로 철저히 번역하고 회의분석자료집을 만들어 가지고 온다.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가와 자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분석과정을 거친다. 특히 정보통신국제전략국에도 우리 식으로 연구관이라 할 수 있는 자문가가 다수 참여하여 자문의견을 내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정보와 분석은 각 기구 담당자에게 취합되고 과장급에 보고되고, 두 사람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모든 정책을 사전에 일본 현지에서 결정하고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회의장 현지에서의 의사결정은 유연하지 못하다. 따라서, 일본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28) 2008년 9월 현재, 국제정책과장은 Ms. Makiko Ymada, 국제기관실장은 Mr. Yurie Torigoe가 맡고 있다.

29) 2008년 9월 현재, 국제경제과장은 Mr. Eiji Makiguchi, 다자간경제실장은 Mr. Masayasu Nakano가 맡고 있다.

30) 2008년 9월 현재, Mr. Toru Nakaya가 담당하고 있다.

31) 우리나라는 구 정보통신부 국제기구과의 총괄 담당이 APEC과 OECD를 동시에 담당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도 국제경제과 다자경제분과의 총괄이 APEC과 OECD를 동시에 담당한다. 공무원 제도 자체도 유사점이 많아 일본에도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를 통과한 사무관급 공무원이 공히 근무하고 있으나 총무성에는 다른 부처와 비교하여 기술고치 출신이 많은 편이라고 한다.

에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당 기구 담당과의 담당자와 논의를 시작하여야 하는데, 정확한 근거자료와 자세한 설명을 통해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와 마찬가지로 직책을 순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무관급이 일년 이상 같은 자리에 있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으나, 주무관급 및 연구관들은 수년 이상 자리를 유지하기도 한다.

V. 구조적 차이에 따른 대응 방안

국제기구 내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인 컨센서스제 하에서는 제안국 및 후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제안한 안건에 대한 컨센서스를 얻어 이를 채택·승인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찬성 및 지지 표명이 필수적이며, 우리의 제안에 대한 재청(second)과 지원 발표에 주요국이 먼저 나서주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주요국이 모두 찬성하는 안건에 대해서 국가 절명의 위기가 아닌 이상, 한두 국가가 반대 의견을 내기는 의사진행 상 쉽지 않기 때문에 국제기구 내에서 의사결정은 종종 예상 외로 쉽게 달성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안건에 대해 주요국의 지지를 미리 얻어두고 이를 국제기구에서 제안, 주도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국제 IT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캐나다·일본의 국제기구 IT정책 결정과정은 상이한 모습을 띄고 있다. 각각의 방식이 각각의 나라의 IT 발전에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고안된 독특한 부처 조직과 정치 환경의 산물이다. 미국의 경우, 방대한 국가조직과 다양한 이익단체와 산업, 전문가의 견해를 고루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책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캐나다는 1990년대 이래, 전화 등 통신산업의 민영화가 다른 국가에 비해 늦어져 경쟁력이 뒤떨어지게 되었다는 각성을 통해 경쟁정책 적극 도입 등을 통한 정보통신 분야 산업의 민간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산업성에서 정책을 전담하고 있다.³²⁾ 일본의 경우는 ICT 국제 경쟁력 강화를 단순히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공헌 및 국가 이미지 쇄신을 비롯한 전체 국가 역량 강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주도하여 이를 내무부서 성격을 갖는 총무성에서 총괄하고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사례로 열거하지는 않았으나, 과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와 같이 순전히 정보통신 분야 정책 및 규제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두고, 이 부서 국제담당자가 국제기구 업무를 모두 관할하는 나라들이 아·태 지역에만도 호주,³³⁾ 싱가포르

32) 캐나다 산업성에서는 2006년 3월, 캐나다 전기통신정책의 전면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Canadi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를 통해, CRTC의 경제규제 약화와 공정경쟁을 위한 중재소 설립 등 다양한 정책권고안을 발표하였다. The Telecommunications Telecom Review Panel, <http://www.telecomreview.ca>

폴,³⁴⁾ 태국³⁵⁾ 등 다수 존재한다. 이렇게 국가의 정책과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들 나라와의 협의 시에 각각의 정책 행위 방식에 따른 접근 방법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부처별 업무가 개별적인 미국과의 협의 시에는 안전에 직접 관계하는 해당 부처 담당자를 직접 설득하고, 그가 국무부 HOD에게 안전과 지지 여부를 미국의 입장에서 직접 설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구하는 방안이 최선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 총무성 정보통신국제전략국 국제경제과 다자경제분과 과장과 사무관에게 모든 정보와 결정권이 주어진 형태이므로 총무성 해당 부서와 직접 논의하고, 담당 과장 혹은 사무관이 일본 국내 전문가에게 직접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유리할 것이다. 담당과의 돈독한 관계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³⁶⁾ 미국과 일본이 FCC와 MIC를 통해 방송 규제를 통신 규제 기구에서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 융합 등의 최근의 새로운 이슈에 합의를 쉽게 할 수 있는 반면, 캐나다 산업성에서는 방송 분야 업무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주제라도 방송 및 콘텐츠 관련 내용을 산업성이 결정권 없음을 이유로 유보(reserve)해 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³⁷⁾ 정보통신 관련 기구에서 방송을 전달하는 통신기구 및 인프라의 융합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으나 방송과 통신을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와 관련하여서는 내용, 융합, 어떤 부분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견지해온 것도 관할권 부재의 이유에서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탈바꿈한 우리나라가 컨센서스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향후 방송통신 관련 안전을 제안할 경우 고려해야 할 주요 검토사항일 것이다.

-
- 33) 호주 광대역·통신 및 디지털경제부(Department of Broadband, Communications and the Digital Economy, <http://www.dbcde.gov.au>)
- 34) 싱가포르 정보통신예술부(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the Arts, <http://www.mica.gov.sg>) 산하 정보통신개발청(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IDA, www.ida.gov.sg)
- 35) 태국 정보통신기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ttp://www.mict.gov.th>)
- 36)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태 지역 내에서는 입장이 상충하고 세계적으로는 입장이 같은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때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추진하려는 APT를 중심으로 한 아·태 지역 내 단독 표준화 기구 설립(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반대하고 있으나, ITU 내에서 아·태 표준화 활동의 역할과 비중이 커져야 함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 37) 2008년 4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7차 APEC 통신장관회의(APEC Ministerial Meeting on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dustry, TELMIN7)에서 캐나다 대표는 “the fast-forwarding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s, broadcasting, networks and technologies”라는 “방송과 전기통신의 융합” 어구의 선언문 채택을 강력 반대하여, “the rapid convergence of communications technologies or services”로 최종 합의된 바 있다.

VI. 결론: 국제기구 활동의 의의

국제기구는 국제여론을 주도할 이슈를 생산해내고 정책 대안을 개발해내는 단위 행위자, 주체일 뿐 아니라, 다수의 국가라는 하부 행위자가 동시에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정책 결정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 인류의 공적인 신뢰도 받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방송 분야야말로 국경을 넘는 정책 조율이 긴요한 분야로서 국제기구 주도의 의제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다. 다양한 국가의 이익이 정책결정 과정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 내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요국과의 공통의 이해 관계를 확보하고 각국 내 주요 정책결정자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 대표단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각국의 IT 발전에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고안된 독특한 부처 조직과 정치 환경의 산물인 정책결정 과정을 미리 숙지하고 협의를 전개할 때에 해당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와 결정이 효율적으로, 보다 추진력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가 이미지 및 소프트 파워가 강화된다는 것은 당연히 부수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향후 정책 및 규제 핵심으로 두고 조직 변화를 꾀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연착륙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내적으로 방송법 개정 등 민감한 사안을 다수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국제기구 등 국제협력 업무는 장기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등 당면사안을 제외하고는 논의와 관심의 초점 밖에 있어 안타깝다. 근래 개발된 국제협력의 로드맵만도 몇 건이 되나, 실제 정책으로 결정되고 이행된 건수는 전무하다. 고위급의 해외 순방 및 회의 개최 등 급박한 행사성 정책이 당장에 긴박한 업무인 상황에서는 도리가 없다. 무엇보다 국제 업무를 홍보 수준에서 생각하는 사고를 극복하고, 국제기구와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

국제기구는 세계가 신뢰하는 토론의 공간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화된 세계 속에서 양자간-다자간 협력의 장으로 된 국제기구를 배경으로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한 선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한 기업의 마케팅이나 상품 판매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공적 신뢰를 쌓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제안하는 안전과 기술이 언제나 시의적절하고 표준이 될 수 있으며 미래지향적으로 중요하다는 이미지가 바로 의제주도력으로서, 우리나라의 아이디어가 글로벌 시장에 확산되고 탑재되게 하는 해외시장 개척의 기초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철완·김태은 외(2005), 『IT839전략의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협력 강화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 윤영관·황병무 외(1996), 『국제 기구와 한국 외교』, 민음사.
- [3] 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2006), 『2005년 IT 국제기구 활동 연차보고서』,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 [4] 하영선·김상배 외(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 [5] 권오상(2008), “위원회 조직으로서 FCC에 관한 고찰”, 《정보통신정책》 제20권 14호 통권 444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6] 김태은(2006), “일본의 IT 신개혁 전략”, 《정보통신정책》 제18권 8호 통권 392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7] _____(2007), “일본의 ICT 국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정보통신정책》 제19권 10호 통권 417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8] 박민정·여혁중(2008), “일본의 통신시장 및 규제 현황”, 《정보통신정책》 제20권 16호 통권 446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9] APEC Telecommunications Working Group.(1991). The State of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Regulatory Environment of APEC Economies.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KISDI).
- [10] Zarkin, Kimberly A. and Zarkin, Michael J.(2006).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ront Line in the Culture and Regulation Wars, Greenwood Press.
- [11] Amoretti, Francesco.(2007).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CTs Policies: E-Democracy and E-Government for Political Development”. Review of Policy Research. Volume 24. Number 4.
- [12] Bearce, David H. and Bondanella, Stacy.(2007).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Socialization, and Member-State Interest Converge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1, Fall 2007.
- [13] Kratochwil, Friedrich and Ruggie, John Gerard.(1986). “International Organization: a state of the art on an art of the st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40. Autumn 1986.
- [14] 總務省(2008), ICT國際競爭力強化プログラムver.2.0., 總務省.

- [15] Canadi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Panel. 2006.
<http://www.telecomreview.ca/epic/site/tprp-gecrt.nsf/en/Home>
- [16] FCC International Bureau 2007 Annual report. 2008.
http://hraunfos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DOC-279574A1.pdf
- [17] APEC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TEL)
<http://www.apectelwg.org>
- [18] Asia-Pacific Telecommunity(APT) <http://www.aptsec.org>
- [19] OAS Inter-American Telecommunication Commission(CITEL)
<http://www.citel.oas.org>
- [20]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ITU) <http://www.itu.int>
- [21]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http://www.oecd.org>